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¹⁾

사공 일 |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前 재무장관)

세계 속의 한국경제 길잡이-

IGE www.igenet.com

자료문의 세계경제연구원(IGE)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02-551-3334~7 팩스 02-551-3339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에 기조연설자로 초청해주신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본에서 오신 사사키 미키오 일한협회 회장님과 경제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인과 함께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위해 방한하신 후쿠다 야스오 전 내각총리대신께 특별한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한·일 양국에서 이제 막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양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은 물론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이고 성숙된 한일협력 체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양국 정부의 공통 과제는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양국 경제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한 논의를 펼치게 될 이번 한일 경제인회의는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1) 이 글은 2013년 4월 24일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기조연설문이다.

더욱이 미리 예정되어 있던 한일외교장관회의마저 취소되는 등 정부 차원의 양국 관계가 크게 경직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양국 경제계 지도자들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모인 이 회의는 더욱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반대편에 위치한 인구 1,100만, 그리고 유럽연합(EU) 전체 GDP의 2%에도 못 미치는 그리스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인구 80만의 조그만 섬나라 Cyprus의 국내경제 문제마저도 함께 걱정해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관련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조그마한 마을화 하고 세계경제가 깊은 통합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계 어느 한 나라나 지역도 독자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지구촌 전체 차원의 국제공조와 함께 지역 차원의 긴밀한 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다극화(multi-polar)라기보다 오히려 무극화(no polar) 혹은 G-Zero적 상황 하에 있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촌 전체 차원의 협력과 정책공조에 관한 중지를 모으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인 자유무역(free trade)과 국제금융(financial stability)의 안정을 이룩하는 일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 진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uni-polar) 체제 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국이 중심이 되어 소위 GATT-Bretton Woods 체제가 만들어졌고, 세계경제가 필요로 했던 자유무역과 금융 안정이라는 글로벌 공공재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냉전체제 하에서 있었던 당시의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 전후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을 가장 잘 활용해서 성공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 두 나라는 글로벌 공공재의 충분한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경제 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예를 들면, 2001년에 시작된 WTO 체제 하의 DDA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탈냉전 시대를 맞은 세계가 무극화 상황 하에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웃 간 혹은 지역 차원의 협력, 즉 쌍무주의(bilateralism) 혹은 지역주의(regionalism)는 크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 차원의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갭이 지역 차원에서 어느 정도 메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일 두 나라와 중국이 속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력은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현재까지 한·중·일 3국 경제는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 없이 오로지 시장기능에만 의해 상당 수준의 통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실물경제와 무역 규모, 재정과 금융 그리고 외환보유고 등 모든 측면에서 한·일 양국은 세계 경제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일 양국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은 비단 양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를 위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20 재무장관회의는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의 Lehman Brothers 파산 직후부터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게 되었지요. 이 G20은 세계경제의 공동번영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19개국과 유럽연합(EU)이 집단적으로 발휘해보겠다는 목적에서 출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2008년 출범 이후 세계는 G20을 중심으로 긴밀한 거시경제 공조와 보호무역주의 자제에 적극 나서게 되었고, 2007/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가 1930년대의 국제공조 실패에서 얻은 뼈저린 교훈을 잊지 않았기 때

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에 의한 리더십 발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G20을 통한 적절한 리더십 발휘가 상당히 불확실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어느 나라도 앞장서서 G20 체제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세계 여건 속에서 한·일 양국은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의 번영과 지속성장을 위해 서로 함께 협력하고 공동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촌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리더십이 G20을 통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과정에 비추어볼 때, 우리 두 나라가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는 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두 나라는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지역 차원의 각종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추세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부터 우리 두 나라는 중국과 함께 ASEAN+3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지역 차원의 금융협력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전체 차원의 지역협력에 한·중·일 3국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일뿐 아니라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 나라가 반성해야 보아야 할 점은 ASEAN+3 국가 총 GDP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 세 나라가 ASEAN이란 '우산'없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에 와서야 비로소 ASEAN+3 정상회담 기간 중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ASEAN+3 정상회의와 관계없이 3국 정상만이 독자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인 2008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금년 초부터 3국간 FTA 협상도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시작된 우리 양국 간 FTA 협상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이 지역에서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란 목표를 향해 실물과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제안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력 기반이 미흡하여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양국의 기업과 경제계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양국 정부 차원의 협력의 기초가 되는 양국 국민 상호신뢰 기반에 대해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본인은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양국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국민 간의 상호신뢰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국민 간의 신뢰기반을 튼튼히 하려면 양국 국민 모두가 이 지역의 불행했던 과거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신뢰 기반이 튼튼해질 수 없으며, 그 결과 양국 간의 협력 체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힘들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inconvenient truth)’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양국 국민 상호간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양국 국민의 상호 부정적 정서를 자극하는 일부터 자제하는 일입니다. 특히 국민들로 하여금 과거사에 매몰되게 하여 미래지향적인 신뢰기반 형성을 어렵게 하는 일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국 기업과 경제계 지도층은 모든 경로를 통해 정치지도자들이 양국민의 신뢰관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치적 언행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양국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전쟁과 상호 파괴적 역사적 유산을 가졌던 유럽의 주요국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함께 협력하여 상호신뢰 기반을 구축한 경험에서 유용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 두 나라의 모습이 너무 편협하고 왜소하게 비치지 않도록 우리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하지 않을까요.

불행히도 최근에 와서 한·일 양국 국민 간의 상호신뢰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면,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2010-11년의 63퍼센트 수준에서 현재 39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어느 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또한 2008년의 정점에서 현재에는 30퍼센트 수준으로 낮아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한국 언론매체 여론조사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이란 측면에서 현 일본 아베내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6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시각은 거의 80퍼센트가 부정적이며,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 역시 수년 전에 비해 크게 떨어진 30퍼센트 정도만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양국 국민 상호 간의 신뢰도가 크게 낮아지게 된 것은 양국 정치지도자들의 사려 깊지 못하고 인기영합적인 언행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양국 국민 간의 상호신뢰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양국 기업과 경제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양국 경제계는 양국과 이 지역 전체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상호 win-win할 수 있는 positive-sum적인 공동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일 양국뿐 아니라 중국도 참여하는 동북아지역의 positive-sum적인 사업으로서 환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공동사업 개발과 한일 간의 공동 자원 및 에너지 개발과 비축, 제3국의 인프라 건설 공동참여 등 많은 분야의 사업을 적극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분야에서 많은 구체적 협력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대대적 교육 교환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양국 주요 대학 간 공동학점 인정 등 제도적 차원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청년을 일본에 초청하는 '제네시스 2.0'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아베 총리께서 “문화의 교류, 사람의 교류, 젊은이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만들어가고 싶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은 높이 치하할만한 일입니다. 특히 양국의 젊은이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국의 입장을 반추해보는 일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논의될 양국 간 FTA 등 구체적 지역차원의 제도적 협력 방안과 함께 산업과 기술 분야의 표준화에 관한 협력은 우리 양국이 새로운 global standard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망한 분야입니다.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금융 측면에서도 3국간 통화스왑제도의 확대 운영,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을 아시아 지역 차원의 통화기금(monetary facility)으로 만들어나가는 데도 양국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시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 분야 공동 연구·훈련기구를 창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극화 시대의 불안한 세계경제 질서 혹은 무질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빠른 기술변화에 따라 세계는 나날이 더욱 깊은 통합 단계로 진입하게 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수많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함께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 두 나라의 긴밀한 정책공조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점은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한·일 경제계와 양국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를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무척 뜻 깊은 일이라고 봅니다.

모쪼록 이 시의적절한 회의가 새롭게 펼쳐지는 국제여건 속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 회의로 기록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IGE

MEMBERSHIP GUIDE

법인 회원

- 1 구좌당 연 1,000만원 (중소기업 연 500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개인 회원

- 1 구좌당 연 50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제공

학생회원 (대학원 및 대학생)

- 1 구좌당 연 5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이메일 서비스

※ 모든 후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가입 문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T 02-551-3334~7

F 02-551-3339

E-mail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